

자치구간 경계 조정 등 의석수 지킬 방안 찾아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어떻게



<3> 광주·전남 4석 잃나

오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선거법 개혁안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석을 최대 4석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개혁안이 확정되면 현재 광주는 8석에서 6석, 전남은 10석에서 8석 그리고 전북은 10석에서 7석으로 각각 감소해 호남에서 국회의원의 의석 7석이 사라

전북까지 포함해 7석 사라져... 호남정치 위상 추락 불가피
인구수 기반 선거구 획정... 선거 때마다 선거구 지키기 위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영남에서도 8석이 줄지만 호남에 비해 영남의 현 의석수가 3배라는 점에서 호남 정치의 위상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향후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도 인구수를 기반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11월 안에 선거법 개혁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안을 살펴보면 호남에서 ▲광주 동남을 ▲광주 서구를 ▲전남 여수갑 ▲전남 여수를 등 4개 선거구

가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광주·전남지역 선거구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탓이다. 광주시의 자치구별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서구와 남구, 북구는 매우 높은 반면 동구와 광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51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5년엔 14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치구별 인구규모는 지난 2015년 기준 북구(46만명), 광산구(41만명), 서구(31만명), 남구(22만명), 동구(11만명) 순이며 2035년에는 북구(43만명), 광산구(42만명), 서구(29만명), 남구(22만

명), 동구(9만명) 순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구와 서구, 동구의 인구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6년엔 인구 감소로 광주 동구 선거구가 사라질 우려가 제기되자 동구와 남구를 합쳐 동남갑과 동남을로 다시 선거구를 나누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사실상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같은 '케리맨더링'에 가까운 인위적인 선거구 개편밖에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매년 선거 때마다 부족한 인구를 짜맞추지 않으면 호남 의석수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로 불균형한 자치구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해 관계가 얽힌 정치인과 지역민의 반대도 매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에도 자치구 경계조

정에 나섰지만 사실상 손을 놓았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는 '물דת타입'도 놓쳤다.

광주시가 추진한 자치구 경계조정안을 살펴보면 현재의 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광주 자치구별 인구 규모 편차를 현재 23.5%에서 광역시 평균인 18.6%로 낮추는 게 뼈대다. 광주시가 마련한 소·중·대별 경계조정안은 소폭으로 조정했을 경우 동구·16만3403명, 서구·30만8591명, 남구·21만9855명, 북구·37만6915명, 광산구·41만6285명이다. 중폭 조정안은 동구·16만3403명, 서구·30만8591명, 남구·21만9855명, 북구·44만3282명, 광산구·34만9918명이다. 대폭 조정안은 동구·20만5727명, 서구·36만5775명, 남구·25만9888명, 북구·40만958명, 광산구·25만2701명이다.

이처럼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성사됐다면 동남을이나 서구갑의 경우에도 인구하

한선인 13만6565명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자치구 경계조정은 구의회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극심하다. 행정동이 다른 자치구로 묶이는 과정에 정치인 간 유불리가 극명해지기 때문에 정치권이 반발하고, 기중·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어 반대가 심하다.

지역 한 정치인은 "인구수 감소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하지만 지역 정치계가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는 적용 못 하더라도 다음 21대 총선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자치구 경계조정을 마무리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원판단 촉각 신병처리 결과 '윤석열-조국 거취' 번질 듯

검찰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사문서 위조 등 거론 혐의 5개
5촌 조카와 공범 여부 등 쟁점

검찰이 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소환함에 따라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거론 혐의만 5개 이상... 5촌조카와 공범·'공직자윤리법' 등 쟁점=검찰은 '망신주기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비공개 소환 방식을 택했지만,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수위와 강도까지 조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에 대한 출석 및 5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밀도 높은 '압축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5개 이상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

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추가 혐의도 들어 다보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립코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투자처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 종류와 내용이 많아 정 교수를 한 차례 이상 더 불러 조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정경심 영장 청구 방침에 무게... 신중론도 제기=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정 교수를 여러 의혹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다가 청와대 및 여권과 각을 세워가면서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불구속

기소를 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의 신병처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의 거취를 비롯한 정국 향방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역지 수사'와 관련한 비판과 관련해 부담을 크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번 수사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장관을 직접 소환해 여러 의혹에 연루됐는지 조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다만 수사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논란과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수사 동향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적절” vs “황제 소환”... 여야 정경심 소환 놓고 공방

여야는 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공개 소환으로 '수사 외압'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혜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 소환' 됐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비공개 소환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압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은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고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다.

정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적절한 조치며 앞으로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 교수 소환을 계기로 승자독식을 위한 진영싸움이 국민을 위한 개혁 경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김경현 대변인은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절차와 내용이 있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얻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 옛.밝은광주안과